

사업비 15조 중 1%도 반영 안 돼... 후반기엔 속도 내야

尹 대통령 임기 반환점, 대선 공약 점검 - 광주

5·18 헌법 전문 수록도 난망 AI 영재고·복합쇼핑몰 등 일부 공약사업 순항에 '위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반환점을 돌면서, 현 정부의 노골적인 '광주패싱' 기조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공약 중 대부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공약 이행률이 각각 40%와 1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윤석열 정부 역시 광주 대선공약 이행을 상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 등 일부 공약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점은 위안이 되고 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 광주지역 공약으로 15대 정책과제·4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추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1호 정책과제로 AI반도체특화단지조성(AI반도체 Farm)도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제 속도를 내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까지 광주시가 확보한 관련 국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총 대선공약 사업비는 15조 4047억원인데, 현재까지 반영된 사업비는 1%에도 못 미치는 1153억원(일부 협의사업비 미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비 반영이 필요 없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

다는 점이다. 발의-공고-의결-공포 순으로 이뤄지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개인 발의가 첫 시작점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움직임은 전무하다.

광주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대표 도시' 구축 사업은 그 위상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미 광주시가 선점한 인공지능 실증 벨리 조성(AI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사이, 대구시 등 타 자치단체들이 빈 틈새를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 등 전국 곳곳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심장'과도 같은 국가 데이터센터보다 규모가 큰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그룹이 대구에 1조원 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도 AI산업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내년부터 5년간 추진 예정인 광주시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정부에서 30% 이상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하나의 대선 공약인 도심 공항 이전 사업 역시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 뿌리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만 키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 광주시에 대한 국비 보조금 삭감 등 광주패싱 현상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한 예로 사업기간이 2004~2028년까지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국책사업)'은 광주에 문화전당 건립·운영비 외에도 문화적 도시 환경조성비 등으로 총 1조 3807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비용은 29.6%(4012억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국비 지원 규모는 2023년 513억원에서 올해 22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또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위해 시 예산 369억원을 들여 사업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대부분이 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광주 패싱'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여러 사업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역의 미래가 걸린 대형사업의 경우 정부 협조 없이는 사실상 성공이 불가능하다"면서 "낙후한 광주의 현실을 감안한 국비 배정과 함께 민주당 등 정치권의 관심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책 읽는 '인문 도시' 광주 광주시가 지역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38억원을 배정했다. 한강 작가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전일빌딩 245.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산업·인재·창업 등 '쓸 데 쓰는 적극 재정' 7조 6069억원 전남, 인구·청년·복지 대폭 늘려 민생경제 지원 12조 5436억원

내년 예산안 시·도의회 제출

광주시가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산업·인재·창업 등 '광주 도약'을 목표로 1년 살림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3면>

시는 재정난을 고려해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쓸 데 쓰는 적극 재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올해 예산 대비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 규모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교육 분야는 올해 예산(1998억원)보다 2815억원 증가한 4813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440억원 줄어든 3025억원으로 구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조166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282억원 늘었다. 교통·물류 분야도 올해 예산보다 1718억원을 증액해 8929억원이다. 국토·지역 개발 관련 예산도 전년보다 1082억원 줄어 1325억원만 편성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에 중점을 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12조 54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올해 본예산보다 2.4% 늘어난 규모로, 집행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12조 2462억원)보다 2974억(2.4%)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666억원(3.8%) 증가한 9조 9622억원, 특별회계는 298억원(2.7%) 늘어난 1조 1386억원이다. 인구·청년·복지 분야(3조 5513억원)가 올해(3조 3871억원)보다 1642억원 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1조 8964억원)도 올해(1조 8081억)에 비해 883억 증가했다. 문화·관광 분야도 올해보다 240억 증가했다. 글로벌대 사업비가 늘면서 공공행정 등의 분야(1조 4719억원)도 올해(1조 4522억원)보다 19억 늘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사업 축소(125건 170억)와 장기 SOC 사업-유사 중복·연례 반복적 사업 예산 삭감(498건 1400억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남 발전을 위한 중점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도민안전·SOC 분야와 일자리·경제 분야는 국비사업 감액에 따라 감소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아트 광주, 키아프·프리즈에서 답을 찾다 ▶11면

팔도 건축 기행 - 광주 '동구 인문학당' ▶18면

KIA '마당쇠' 장현식, LG로 떠났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